

정치권, 가상자산 정책 마련 속도… 산업 육성 vs 투자자 보호

〈與〉

〈野〉

6·3 조기 대선

與野, 가상자산 의제 선점 돌입
국민의힘, 제도화 등 7대 공약 발표
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 공개

오는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가상자산 관련 의제 선점에 돌입했다. 1600만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7대 공약’을 공개해 가상자산 산업 성장을 목표로 제시했고, 민주당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안과 산업 진흥책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준비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당 차원의 ‘디지털자산 규제 해소를 위한 가상자산 7대 공약’을 공개했다.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 ▲기업·기관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현물 ETF 거래 허용 ▲토론 증권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과세 체계 마련 ▲가상자산 산업 허브 육성 등 규제 축소와 제도화에 중점을 뒀다.

앞서 지난 24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 리뷰 세미나’를 개최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초안을 공개했다. ▲디지털자산업 정의 및 육성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발행신고서 제도 ▲발행·유통 공시 분리 규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안 및 산업 진흥책을 포함했다. 전문가 및 업



국민의힘은 2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당 차원의 ‘디지털자산 규제 해소를 위한 가상자산 7대 공약’을 공개했다.

계 의견을 수렴해 법안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여·야가 잇달아 가상자산과 관련된 정책안을 공개하는 것은 오는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상자산과 관련된 의제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1629만명에 달한다. 지난해 3월 1400만명을 돌파한 지 11개월 만에 200만명 이상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가상자산 거래액도 일평균 6조원에 육박했다.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각국들이 일반 법인에도 투자 목적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규제 완화와 제도화에 힘쓰는

반면, ‘자금세탁 방지’에 주안점을 둔 국내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수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해서다.

여·야가 가상자산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일부 후보자의 대선 공약에도 가상자산 공약이 등장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27일 “가상자산 시장 및 산업을 육성해 세계 최대 가상자산산업 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고, 홍준표 후보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및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공약으로



지난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정부위원회가 주최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에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앞줄 가운데)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든 만큼 입법을 위한 활발한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책 방향성 설정을 위해 정치권 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업계의 광범위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은 초기의 장밋빛 기대와 과도한 우려가 교차하던 시기를 넘어 제도화 과정을 하나씩 밟는 시점에 진입했다”라며 “점진적인

제도 개선과 관련 기술혁신이 어우러지면 (가상자산 산업이) 좀 더 성숙한 발전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많은 과제들은 당연히 추후 제도화 과정에서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종 채널을 통해 제기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국회, 당국, 업계, 전문가, 관계자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교보생명, SBI저축은행 인수 금융지주사 전환 속도낸다

인수금액 9000억… 단계별 지분 취득
“손보사 인수 등 비보험 금융사업 확장”

교보생명이 1등 저축은행을 인수한다. 또 손보사 인수합병(M&A)을 통해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한다.

교보생명은 28일 이사회를 열고 SBI저축은행 지분 50%+1주를 오는 2026년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수키로 결의했다. SBI저축은행 최대주주인 SBI홀딩스로부터 SBI저축은행 지분을 매입한다. 인수금액은 약 9000억원이다.

SBI저축은행은 2024년말 기준으로 총자산 14조289억원, 자본총계 1조

8995억원, 거래 고객 172만명을 보유한 업계 1위 저축은행이다. 지난 2021년 3495억원, 2022년 328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해왔다. 2023년과 2024년에 경기 침체 속에서 각각 891억원, 808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교보생명은 저축은행 운영 경험이 없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지분을 취득할 예정이다. 우선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승인을 받은 다음 하반기 중으로 30%(의결권 없는 자사주를 감안한 실제 의결권 지분 35.2%)의 지분을 취득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지주사 전환에 맞춰 2026년 10월말까지 50%+1주(의결권 58.7%)를 인수할 예정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오는 2027년부터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당기간 공동경영을 할 계획”이라며 “1등 저축은행으로 키운 현 경영진을 교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뜻밖선(매수청구권) 분쟁이 사실상 일단락되면서 금융지주 전환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저축은행업 진출은 지주사 전환 추진과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이며 향후 손해보험사 인수 등 비보험 금융사업으로의 영역 확대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사옥 전경. /교보생명

/김주형 기자 gh471@

KRA 한국마사회

도심 속의 선물 같은 공간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문의: 1566-3333

※구매상한선 준수 건전한 여가생활의 시작입니다.